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10월

"

"

가족관련 법안 동향

한국건<mark>강가정</mark>진흥원

[오마이뉴스유창재 기자, '23.09.19.]

[뉴시스, 권지원 기자, '23.10.04.]

70947#_PA

https://mobile.newsis.com/view.ht

ml?ar_id=NISX20231004_00024

"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 '청년 복지' 예산 3309억 편성	[空心計學學報] 23,09.19.] https://www.ohmynews.com/NWS_V ew/at_pg.aspx?CNTN_CD=A0002962
다문화가족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 ② 20일(수), 결혼이민자취업지원 등 '24년도 확대·신규 사업 현장의견 청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9.20.] https://www.mogef.go.kr/nw/rpd/nw 001d.do?mid=news405&bbtSn=709.
내년 공동육아나눔터 전국 435개소로 확대 ○ 아파트,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동 돌봄공간으로 탈바꿈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09.26] https://www.mogef.go.kr/nw/rpd/nw pd_s001ddo?mid=news405&bbtSn= 09568
66 다민족 학교 시대 성큼'전교생 30%가 다문화' 71곳	[뉴시스,김정현 기자, '23.0926] https://www.newsis.com/view/?id=Nt 20230926_0002465127&dD=10209 plD=10200
₩ 네 집 중 한 집은 고령자 가구1년 새 고령자 50만명 급증) 1 [한국경제 박상용 기자, '23.09.2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 309269056i
''시족친화기업이 성공재택하면 게으른 사람? 그런 시각부터 바꿔리	[조선일보, 오주비기자, '23.09.23.] https://www.chosun.com/national/w medical/2023/09/23/NBRA5TU5DNE PJ3WMG3E7AY/
₩ 가족돌봄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고립·은둔 청년은 공동거주	[뉴시스, 이연희기자, '23.09.19.] https://newsis.com/view/?id=NIS X20230919_0002456084&dD= 10201&pID=10200
★6 부모도 단축근로・배우자 출산휴가급여 '5→10일'"저출산 극복	### [해럴드 경제, 김용훈 기자, '23.10.0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2ud=20231004000185
	[뉴시스, 권자원 7 자, '23.09.30.] https://www.newsis.com/view/?id =NSX20230927_0002467372& cD=10201&plD=10200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 연 3.2만명 추가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강화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10.05.] https://www.mogef.go.kr/nw/rpd/nv pd_s001d.do?mid=news405&bbtSr 09577
66 인공지능이 고립가구 돌봄 맡는다	[해럴드 경제박정규 기자, † 23.10.10.] http://news.heraldcorp.com/view.ph ud=20231010000473
≦봄노동자들,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 촉구	[오마이뉴스김호세아 기자, '23.10.10.] https://www.ohmynews.com/NWS eb/View/at_pg.aspx?CNTN_CD=A00 968069
" "1인가구 청년은 '독립'했지만, 사회의 안전망은 필요해"	[오마이뉴스, 황정욱기자, '23.10.12] https://www.ohmynews.com/N WS Web/View/at pg.aspx?CNTN _CD=A0002968496
SE 공백부터 해결해야 저출생 극복	[한국경제, 구은서기자, '23.10.11.] https://www.hankyung.com/article/ 023101112721
₩ 검찰, '양육비 미지급' 징역 6개월 구형첫 실형 여부 주목	[YTN,임예진기자, 23.10.12] https://www.ytn.co.kr/_ln/0103_2 02310120530418821

결혼 출산 부정적 인식 개선하려면..."가족친화적 미디어 환경 필요"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 주요내용	
가족 생활 . 돌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2023-09-27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체가구 대비 낮은 실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미성년 된 환경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 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때문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정이며,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비가 가장 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 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또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2023-09-26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위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성 이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시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부제기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세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장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될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상담소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원 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2023-09-18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7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는 지적이 있음. 지역 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2023-10-05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 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 후"로 확대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2023-10-05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사용할 날'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균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 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2023-09-27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 • 가정 양립 실택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실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라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와는 직무 • 근로조건의 변경을 방지하고 육아휴작또한 임금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근로자에게 ⁵ 사용자에게는 국가가 고용유지비용 등을 우선하 활성화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에게도 일임안 제19조 및 제20조 등).	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자의 절반이 육아 났으며,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육아휴직을 한 근로환경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사 나는 육아휴직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여 합리적 근거 없 지후 복직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게 한 당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2023-09-27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특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 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휴직 전과 같은 입 복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현장에 근무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근무장소 또는 거 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불리한 처우를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 '근무지역에 디 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여,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를 금지하고 있음. 당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복귀하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 업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6인)	2023-09-26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자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돌봉휴직·휴가와 같은 휴직·휴가 등의 제도를 그러나 이제는 여성을 가사·양육의 일차여가 강조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속돌봄 휴직·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함.	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를 규정하고 있음.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 데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 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저출생	
가족관련 연구 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위기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들	우리사회의 장애인, 젠더(여성), 다문화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순으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노인여성, 노인 비정규직, 고령장애인 등의 단어에서 복합차별의 표현과 현상이 발견됨. 기후위기 심화, 인공지능 확산, 다문화이주민 확대, 고령화등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을 확산하는 요인으로 전망되나 법의미비로 사회적 소수 약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음. 유럽 등 각국에서 기업의 인권과 환경보존 노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법률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등 차별과 혐오 관련 선진국들의 입법 주요 내용과 사회가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그룹, 인공지능의 차별, 유전자 차별 등 새로운 현상을 법과 규제에 담고 있는 해외 사례를 분석함.	「국회미래의제 23-01, 국회미래연구원」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 ?mode=view&articleNo=5925&article.off set=0&articleLimit=9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다 학제적 연구 통한 해결책 찾 아야	빠른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질병으로까지 여겨지기 시작했다. 1인 가구는 함께 사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도 크다. 1인 가구, 우울, 고립, 외로움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유형화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서비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해 이태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대한 공통의대책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 중심(소득보상, 돌봄 등)으로접근하는 것이 옳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최은영(충북대학교) 교수는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리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가장-시장이라는 커뮤니티를살리는 방식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이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관계의 사회복지제도화'를 제안했다.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 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ld=ART003006009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이 원고는 코로나19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친 사회통합 인식의 영향을 탐색해 보고 이들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함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사회통합, 신뢰, 사회적 자본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정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신뢰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 제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겪은 어려움들을 회복시키는 장기적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보건복지포럼, 2023. 09. 제323.02.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 r/hsw/view?seq=56797&volume=56793
	코로나19전후 사회적 지지 와 사회통합 인식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본석하여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 수준과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명균 1~2명이었지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2.79명으로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움을 요청할 주 대상으로는 친척과 친구를 꼽았다. 직장 동료, 이웃,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꼽은 응답은 매우 저조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장이 들을 주신하고자 하는 궁극적목적하에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포럼, 2023. 09. No.323.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 r/hsw/view?seq=56803&volume=56793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 게 관계 맺고 있는가: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본 보고서는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한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생산·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한국사회의 관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민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입의 역사 적·정책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최대 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76., 국회미래 연구원」 https://www.nafi.re.kr/new/report.do? mode=view&articleNo=5781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사회 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 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 차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주는 영향과 그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청년사회경제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적용했다. 총 2,041명의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남자는 1,074명, 여자는 967명이었고, 종속변수는 우울, 사회참여이며, 통제변수는 학력, 연령, 결혼, 가족동거 여부 등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지지 제공자 유형 등 2가지이다. 기저모형은 남녀 집단의 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했고, 대안모형은 자유롭게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대안모형이 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주었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청년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 친구가 주는 정서적 지지가 여성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수 있는 거리두기에서 청년들의 우울을 감소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연구, Vol.118, No.3, 2023. 10.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jou rnalView.do?p=1&idx=131168
가돌봄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 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다층분석	결혼이주여성이 살아온 출신국의 문화가 어떠하며 한국 문화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가 다를 수 있다. 이에 결 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그들의 사회 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효율 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령이 높을수 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가정방문 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 는 반면,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더 증가했다.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했다. 결혼이주여성을 지 원하는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는 연령이 낮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 고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 01002/43830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 의 차이 분석:성별과 지역 차 이를 중심으로	2022년 혼인 건수는 191,69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 층의 혼인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 거주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통틀어 가장 높았다. 이에 혼인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지역적 배경에 주목했다. 개인의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의 이동 경로별로 혼인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따라 혼인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지방에서 성장해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지방→지방)이수도권에서 성장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주도권→수도권)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 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수도권 집중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여성에게 더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거주 청년층의 과일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방 거주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다양성을 높이고,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 01002/43829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한부모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빈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단선적인 한계를 지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첩적-복합적인 빈곤의 현황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양부모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모든 지표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산 빈곤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였음. 또한 이러한 수치에 대해 그 경험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 가구주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대다수였음. 특히 건강이 취약한 경우 소득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각 차원별 빈곤 경험이 강력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 본연구 결과를 통해 각 6개 차원별 병정책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각 차원은 독립적이 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원에 천착하는 것만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려움을 강조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하고, 한부모 가구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KWDI 이슈페이퍼, 제23권 제7호, 2023. 08.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 uePaperView.do?p=1&idx=131062